

< 要約 >

○ 過去 우리 經濟의 危機와 對應

- 과거에도 우리 경제는 사채 金融 危機('72), 外換 危機('74), 外債 危機('81), 勞使 危機('87) 등과 같은 몇 번의 경제 위기를 겪었음
- 이런 위기에 처해 정부는 8.3措置, 外換 管理 強化 및 重化學工業化, 豫算凍結 및 機械 國産化 政策, 勞使關係 改善 施策 및 製造業競爭力 強化 對策 등으로 대응했음
- 이번 경제 위기에 대해서 정부는 財政緊縮과 産業構造 調整政策을 펴고 있으나, 과거처럼 1-2년 내에 호전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過去 經濟 危機와 다른 점

- 이번 경제 위기는 成長率 低下, 失業率 上昇, 經常收支 赤字로 인한 外債償還比率(DSR)의 上昇, 外換危機 憂慮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長期的으로 回復 不可能한 沈滯에 빠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 外國 經濟危機와 比較한 示唆點

- 역사적으로 볼 때 영국, 미국 등의 선진국이나 중남미, 舊社會주의국도 경제 위기가 있었는데 대체로 10-20년 정도의 장기 조정기를 거쳤음
- 최근 우리 나라의 經濟 危機는 競爭力 弱화에 起因한 것이며 이것은 1980년대 미국의 사정과 과 유사하기 때문에 産業構造 調整을 통해야 극복가능할 것임

○ 經濟危機論 登場의 實體는 페러다임 變化에 대한 對應力 問題임

- 경제 위기는 등장은 우리 경제가 페러다임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데에 따른 것이며, 이것이 계속되면 長期的인 景氣 沈滯可能性도 있음
- 페러다임 변화는 글로벌化, WTO 體制에 의한 經濟 政策의 主權 制約, 情報技術 革命 및 經濟 效率의 強調 등임
- 그리고 危機論의 根本 原因은 變化의 必要性에는 共感하나 行動이 뒤따르지 못한 데에 있음
- 高費用·低效率 構造도 우리의 변화가 지진한 데 기인한 것임

○ 競爭力 再構築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

- 정부의 經濟 政策은 자주 발표되고 있으나, 基本 틀은 그대로 둔 채, 部分的인 診斷과 對症的인 處方에 치우치고 있어 별로 效果가 없었음.
- 새로운 패러다임하에서는 '企業이 政府를 選擇하는 時代'이기 때문에 기업 경영에 유리한 환경 조성이 중요함
- 政策의 立案도 중요하지만 效率的인 執行이나 事後的인 政策 評價에도 높은 관심이 필요함.

○ 主要 政策 方向

- 通商 政策

- 政策 基調를 기존의 防禦的·消極的인 태도에서 積極的·攻擊的인 戰略으로 轉換해야 함.
- 大統領에서 海外 公館 職員에 이르기까지 모두 세일즈 外交의 첨병이 되어야 함

- 産業 支援 金融 制度

- 實物 經濟에 기여해온 政策金融은 金融 産業의 萎縮, 通貨信用 政策의 效率性 低下를 招來
- WTO補助金 協定과 OECD補助金 減縮 論議에 따라 각종 産業金融制度의 全盤的인 改革이 불가피함.

- 産業人力 政策

- 産業人力 政策은 國家競爭力 擴充만이 아니라 '삶의 질' 提高에도 중요성이 큼
- 高賃金·人力 不足 時代를 맞아 인력 供給 基盤의 量的·質的 擴充 및 活用度 提高가 필요함.

- 産業技術 政策

- 企業의 技術 開發 支援을 위해 戰略 技術이나 有望 産業 技術 등의 開發 및 製品化 支援이나 複合型 產學研 共同 研究 基盤을 全國的으로 大幅 擴大시킴

- 産業構造 調整政策

- 바람직한 産業 構造 調整 方式은 民·官의 合意를 통해서 有望 産業을 導出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면서 유망 산업의 니즈를 세밀히 파악해서 需要 充足型 資源 供給 體制를 構築하는 것임.

<主題 發表>

최근 모든 사람들의 공통 화제로서 경제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이야기가 거의 이구동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어려운 내용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過去의 經濟 危機論

최근 경제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경제는 이미 사채 금융 위기('72), 외환위기('74), 외채위기('81), 노사위기('87) 등과 같은 몇번의 경제위기가 있었습니다.

경제위기설은 과거에도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수차례 나왔습니다. 1972년 박 대통령 시절에는 사채 때문에 금융 비용이 너무 높아서 기업들이 다 쓰러진다고 해서 8·3긴급조치로 사채를 동결했습니다. 1974년 오일쇼크 이후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나서 당시 김용환 재무부 장관이 매일 외환보유고를 체크해서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하루하루를 마치 살얼음 덩어리 지나가는 듯한 상태도 있었습니다. 1981년 5공화국 때에는 외채위기론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몇번째 외채 대국이다 해서 외채 망국론이 나오는 등 굉장한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1987년에 노사위기가 있었고 최근에 와서 또 다시 노사위기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72년 기업재무위기 때는 8·3조치라는 극약 처방으로 기업의 사채를 동결시켰고, 1974년 외환위기 때는 외환관리를 강화해서 정부가 달러화 사용에 대해 적정 규제를 하면서 구조적으로는 중장기적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폈습니다. 1981년 외채위기 때는 경제안정화 시책의 시행으로 예산 동결 조치를 했고 산업부문에서는 기계국산화정책이 상당히 강도있게 추진되었습니다. 1987년 노사위기 때는 노사관계 개선 시책과 위축된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 제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세워

이번 경제 위기에 대해 정부는 재정 긴축과 산업구조 조정 정책을 펴고 있으나, 과거의 위기처럼 1~2년 내에 호전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 매월 한번씩 청와대에서 회의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경식 현 부총리는 거품을 빼기 위한 재정긴축정책과 산업구조 조정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위기들은 1~2년 어려웠다가 다시 좋아지는 현상을 되풀이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대비를 잘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엔고 등 외생적인 요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위기도 과거의 위기처럼 1~2년 어렵다가 다시 좋아질 것이냐 아니면 몇 년 더 계속될 것이냐 하는 것이 모두의 관심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외국 경제위기와의 비교

역사적으로 볼 때 영국, 미국 등의 선진국이나 중남미, 구사회주의국도 경제 위기가 있었는데 우리 경제 위기와 달리, 10~20년 정도의 장기 조정기를 거쳤습니다.

다음에는 외국의 경제위기를 살펴 보겠습니다.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1970년대 영국이 영국병에 걸려서 경제가 계속 위축되어 '지는 해'가 된 적이 있었고, 1980년대 중남미가 외채 상환을 못해서 국가가 파산지경에 있었으며, 미국은 쌍둥이 적자, 세계 최대의 채무국이 되면서 2류 국가로 떨어져 Pax Americana 시대가 가고 일본 시대가 오느니 하는 논의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구소련, 동구, 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가 붕괴되고 국가 자체가 와해되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국 위기들의 공통점은 위기를 극복하는데 10~20년 정도의 조정 기간을 거쳐 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는 등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우리 한국은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경제지표 면에서 위기의 강도가 훨씬 덜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외국의 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면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체제의 기본적인 결함 때문에 경제가 붕괴되는 일

현 경제 위기는 경쟁력 약화에 기인한 것이며 이것은 1980년대의 미국과 유사하기 때문에 산업구조 조정을 통해서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미국이 겪었던 위기와 현재 우리가 겪는 위기의 유사점이 있는데 그 원인은 조금 다르지만 경쟁력 약화로 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대책에 있어서 미국은 정보 서비스업, 첨단산업 분야로의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는데 그렇다면 한국도 앞으로 그런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국이 겪었던 노사문제가 한국에도 있고 중남미 국가에서 만연했던 부정부패, 정경유착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유사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렇다면 지금의 위기는 여러 가지 요인이 다 갖추어져 있는 복합적인 위기라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 경제위기와 다른 점

이번 경제 위기는 성장률 저하, 실업률 상승, 경상수지 적자로 인한 외채상환부담률(DSR)의 상승, 외환 위기 우려로 나타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침체에 빠졌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의 위기는 거시 지표상으로 볼 때 과거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특별히 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 92, 93년 2년 연속 5%대의 성장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성장률의 저하는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지만 극복되었고 실업률이 80년대 후반부터 2% 수준으로 떨어져서 거의 완전고용 상태에 있었는데 금년 들어서 갑자기 3.2%까지 올라갔고 금년 말에는 약 4%까지 전망되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 비해서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위기론의 중요한 진원지로 경상적자와 외채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상적자의 GDP에 대한 비율이 작년 4.9%였는데 5% 이상이 되면 걱정되는 수준입니다마는 외채상환 부담률(Debt Service Ratio)이 작년에 8.9% 수준이었는데 IMF 권고기준인 30%이하에 비하면 아직 좀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DSR 비율은 80년대에 약 20% 이상이었고

90년대 들어 흑자가 나면서 많이 줄었다가 금년에 경상수지 적자가 200억불 정도가 난다면 외채상환 부담률이 다시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상수지가 개선이 안되면 외채상환 부담률이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멕시코 브라질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중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외채상환 능력에서 일부의 우려처럼 멕시코와 같은 외환위기에 빠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렇다면 거시 지표나 외채면을 보아서도 그렇고 과연 한국이 지금부터 장기적인 침체에 들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지나친 자기 비하라는 것입니다.

경제위기론의 실체: 패러다임변화에 대한 대응지체

경제 위기론의 실체는 우리 경제가 패러다임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데에 따른 것이며, 이것이 계속 되면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세계 경제질서의 paradigm에 한국이 만족할 만한 속도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바로 경쟁력 위기로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누적이 되면 한국 경제는 앞으로 장기적인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글로벌 경쟁 시대가 도래하는데 무역 장벽의 해소, 투자 장벽의 해소로 외국기업들이 앞으로 제조업보다도 오히려 유통을 위시한 서비스 산업 쪽으로 많이 진출해서 국내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 상당히 충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로 나가서 산업의 공동화가 발생할 우려입니다. 지금 현대에서 최근 스코틀랜드에 10억 불짜리 반도체 공장을 세우고 있는데 영국 수상이 전당 대회에서 ‘한국의 현대가 우리나라에 이런 큰 공장을 세우기로 결정을 했다. 아주 Good News다’ 이런 연설을 했다고 할 정도로 환영을 받는데 국내에서는 아주 비판적이고 매도적인 분위기가 많습니다.

패러다임 변화는
글로벌화, WTO
체제에 의한 경
제 정책의 주권
제약, 정보기술
혁명 및 경제 효
율의 강조 등입
니다.

위기의 근본 원
인은 변화의 필
요성에는 공감하
나 행동이 뒤따
르지 못한 데 있
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정책의 주권 제약입니다. WTO 체제 하에서는 우리나라가 어떤 경제정책을 하고 싶어도 국제적 감시와 견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기술혁명, 경제효율의 강조입니다. 이제는 모든 이념경쟁이 끝나고 전세계는 효율지상주의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전통적인 European Social Model, 복지를 강조하고 사회적인 결속을 강조하는 모델에서 아주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고착화되어 고치기 힘들다는 것이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기업들이 피눈물나는 Restructuring을 하고 있고 일본도 최근에 행정개혁, 금융개혁을 통해서 효율을 제고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변화를 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행동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위기가 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직도 절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위기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면 절감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나? 아직도 그 현상으로써 나타나고 있는 경제 성과가 외국들이 겪었던 경제위기와 비교해 볼 때는 아직도 괜찮은 편입니다. 실업자가 많다거나 대기업이 도산을 하는 상태는 아니라는 점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기업 그룹도 상당히 어려운 면이 많은데 이런저런 이유로 충분히 밖으로 투명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건대는 작년에 한국의 5대 대기업 그룹 중에서 그룹 전체로 보아서 흑자가 난 데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를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알더라도 대기업 그룹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타성, 과거로부터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가 상당히 더디니까 자연적으로 고

고비용·저효율
구조도 우리의
변화가 더딘데
기인한 것입니
다.

비용·저효율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임금이 공장 근로자만 높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1월 미국에 교수를 뽑으로 갔습니다. 갓 취득한 박사학위자들이 미국 대학에 취직하면 연봉 3.5~4만 달러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대학 교수의 초봉과 절대액이 비슷합니다. 또 한국 금융기관들의 임금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계층의 임금이 능력보다 다 높은 것입니다.

금리도 과거에는 금리를 규제해서 7~80년대에 명목금리가 12~13%였고 지금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물가는 그때보다 안정이 되었으니까 실질 금리는 과거에 비해서 더 올라간 것입니다. 공장용지 가격이나 물류비용도 더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경쟁력이 약화가 되니까 수출도 잘 안되고 수입은 늘어나고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경쟁력 재구축의 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자주 발표되고 있으나, 기본 틀은 그대로 둔 채 부분적인 진단과 대응적인 처방에 치우치고 있어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면 경쟁력 재구축의 길이 과연 보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큼 경제 종합시책을 자주 발표하는 나라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노태우 정부 때 제조업 경쟁력 향상대책, 김영삼 정부 들어서 신경제계획을 비롯해서 자본재산업 육성대책이 발표되는 등 경제부총리가 바뀌고 경제수석이 바뀔 때마다 경제종합대책이 나오고 거의 2~3개월에 한번씩 후속대책이 나오고 또 각 부처별로 나옵니다. 저는 이 대책을 만드는 공무원들도 과연 이 대책을 다 숙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대책이 많은데 그러면 왜 효과가 별로 없느냐 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세계경제 운용의 패러다임이 바뀌니까 우리도 바뀌어야 되는데 기본 틀은 그대로

규제 개혁은 행정 조직의 축소 개편, 제로베이스에서의 재점검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로 둔 채 부분적이고 대증적인 진단과 처방에 치우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규제가 과도하고 경쟁 제한에서 오는 경직성에서 고비용, 저효율이 나온다고 얘기하면서도 이것을 혁파하는 노력이 없습니다.

규제개혁은 행정조직의 축소 재편, 제로베이스에서의 재점검 없이는 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임금을 얼마로 규제하느냐 또 수출이 안될 때마다 수출선수금 확대문제가 나옵니다. 수출선수금 비율이 15%면 이것을 13%로 줄이느냐 14%로 줄이느냐 하는 것 가지고 실랑이를 합니다. 수출선수금 제도가 과연 꼭 필요한 것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수출선수금이나 기업의 해외 차입 한도를 확대하면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식의 논리인데 선진국들은 그런 것 다 자유화하면서도 통화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경영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도 말은 많지만 아직까지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달 전에 서울에서 열린 해외공관장회의를 갔더니 외무부장관과 공관장들과의 회의에서, 외무부장관이 토론 주제로 외무부 직원의 해외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서비스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외국대사들은 정말 자기 나라 기업 도와주려고 발로 뛰어다니더라... 그런데 실제 논의 과정에서 그 얘기는 별로 안 나오고 다른 얘기만 쪽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 보았더니 외무부의 인사관리 인센티브 시스템이 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잘 하는 공무원들에게 매리트를 주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것 해 봐야 아무도 안 알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기업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책이 계속 나온다는 말을 했는데 정부가 정책 입안하고 발표하는 데 80~90%의 정력을 소비

정부 정책의 입안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집행이나 사후적인 정책 평가에도 높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과 평가측면 그리고 정책을 개선하는 데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국민에게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재탕, 삼탕 정책으로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요 정책 방향(<부록> 참조)에 대해서는 토론 과정을 통해서 다뤘으면 합니다.

<討論 内容>

사회 : 이 부원장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이진주 원장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모든 경쟁력 재구축이나 정책들은 기업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대통령, 정부, 기업, 소비자·국민으로 이어지는 현재의 삼각형 구조는 정반대의 역피라미드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진주 : 발표에서 기업에 도움이 되는 두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첫째는 모든 경쟁력 재구축이나 정책들이 기업중심으로 되고, 기업의 관점에서 기업의 애로점과 국제경쟁력 제고라는 관점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실제로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둘째 그러한 기업중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책 기조의 패러다임에 근본적인 변화와 전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역피라미드의 발상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조직체계가 삼각형의 위에 대통령이 있고 정부가 있고 기업이 있고 바닥에 소비자가 있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대통령이나 정부가 맨 밑에 있고 그 다음에 각 부처 일선 부문이 있고 꼭대기에 기업, 소비자-국민이 있고 이 기업은 전세계를 무대로 경쟁을 해 나가는 관점에서 정책의 규제개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회 : 감사합니다. 이영기 부원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경기 순환이 이렇게 심각해진 데에는 우리 경제 구조 자체내에 안정화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영기 : 경기 순환이 심각해진 데는 우리 경제구조 자체의 안정화 장치 부재에 있습니다.

첫째 우리 산업구조가 재작년만 해도 경기양극화로 호황업종은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큰 폭의 임금 인상과 특별보너스를 지급한 반면, 불황업종은 고전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편중은 특히 대만과 비교하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보면 경기 변동 과정에서 기업 경영 형태도 물량 위주의 투자로 구조적으로 기업재무

구조 문제는 직접적으로 고비용 저효율에 있지만, 경제·사회·가치관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조가 나빠지고 투자도 효율성 투자보다도 물량적으로 해소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도 경기 변동 완화가 아니라 악화시키는 정책이 많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몇 년전에 재정 운영도 경기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 사이클을 심화시키는 것도 있지 않았는가 싶고, 또 요즘 선거 등 정치 변동도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조 문제를 볼 때는 고비용·저효율을 직접적으로 보는 것뿐 아니라 경제·사회·정치 복합적인 것으로 봐야 된다는데 동감입니다. 지금 상황이 아주 심각한 위기는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고비용·저효율 구조라는 직접적인 것 외에 정치·사회인식·가치관·경제 형태가 고쳐지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 시대에 파탄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면에서 우리가 변화해야 합니다.

외국에서도 전에는 “변화를 수용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죽는다”고 이랬지만 요새는 “변화를 리드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죽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변화를 수용하는 정도를 넘어서 빨리 바뀌어야 된다는 문제인식을 해 봅니다.

사회 : 얼마 전에 어떤 신문에 나라 전체가 법정관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정상 무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정순원 : 작년까지만 해도 경제위기론이 나오지 않았다가 급작스럽게 나빠졌다는 얘기가 분분한데 지난 1, 2년 사이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금년에 경기가 나빠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1988년부터 불행의 씨앗은 뿌려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988년 호황 때 중장기적인 정책 마련을

이번 경제위기는 그 씨앗이 1988년때부터 뿌려졌으나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했기 때문에 야기된 것이며, 저임에 기초한 기존의 생산 방식을 대체시키지 못한 데도 원인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정책들이 피드백 기능이 없이 새로운 것만 좇아 발표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정책들은 이전과 달리 명확한 상황 인식의 변화 위에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못한 데 있습니다. 특히 90년대 초반부터는 민간업계에서 수출할 물건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얘기가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웠던 것은 경제 논리보다는 정치 논리에 의해서 모든 정책을 결정해 왔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60년대 이래로 양질의 노동력과 저임에 기반을 둔 생산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생산요소가 적절한 보완적 역할을 해 주고 있지 못하고 그 속에서 적절한 산업구조 조정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데도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사회 : 예, 감사합니다. 우태희 과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우태희 : 우선 변명을 드리면 정부쪽에서 너무 많은 정책을 발표하고 feed back 기능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것만을 추구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1년 동안의 경제정책들은 분명히 상황 인식의 변화 위에서 발표되었다는 점은 말씀드립니다. 작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현재의 경제위기를 반도체 쇼크라는 외생적인 변수나 경기순환적인 요소에 의한 것이라는 상당히 소극적인 대응 측면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반기 이후부터는 이것을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고비용-저효율 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했고 거기에서 나온 정책이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라든지 정부부터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공공부분에 대한 예산 10% 절감운동' 등이 발표되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발표한 정책은 단순히 비용을 낮춰 가지고는 우리 경제의 회생이나 활력을 찾기 어렵다는 인

90년대에 들어 수출 기반이 와해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집니다. 정책 방향은 과감하게 구조 조정을 통해 벤처 기업이 경제를 이끌어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중에서 특히 WTO·OECD 가입에 따라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과 할 수 없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식 위에서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구조조정 정책입니다.

벤처기업을 계속 육성해서 특수산업 기반을 확고히 하고 이른바 우리 경제의 새싹인 중소기업들을 적극 이끌어 나가자 하는 정책이고 이러한 정책은 기본 가닥에 있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키노 노보루가 쓴 『제조업은 영원하다』는 책을 보면 ‘제조업을 떠나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머물지는 말아라’하는 두 가지 함의가 담겨 있는데 어떤 산업에 몸을 담고 있으면 그 산업을 떠나지 말고 계속 하되 구조 고도화를 위해서 계속 기술개발하고 노력하라는 의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산업기반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느끼는 단적인 예로 70년대~80년대에 무역의 날이나 수출의 날에 상을 받았던 중소기업인들치고 최근까지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분들이 지금 연락이 안되거나 이민을 가거나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을 해서는 전혀 메리트가 없으니까 업종을 다 바꾼 것입니다. 통계 조사를 하면 재미있는 통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사회 : 감사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문제를 심각하고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거시정책, 미시정책, 기업정책, 산업정책, 경제 전체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잠깐 짚어 보았으면 어떨까 합니다. 발표자께서는 WTO 협정이나 OECD 가입에 따라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과 할 수 없는 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태 : WTO 보조금 협정에서 허용보조금으로 되는 것은 기술개발, 연구개발, 환경보호, 지역개발보조금입

WTO 보조금 협정에서는 허용 보조금으로서 기술 개발, 연구 개발, 환경보호, 지역개발 보조금 등입니다.

과거처럼 금융 세계 수단으로 산업을 직접 육성하기보다는 유망 산업을 선정해서 그런 산업들이 발전하는데 필요한 needs를 파악해서 이를 지원하는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니다.

최근 독일, 영국 등 OECD 국가들 보조금 운용형태는 지역개발 보조금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배경은 어떤 특정지역의 산업이 낙후되어서 실업이 늘어나면 사회 문제가 되니까 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보조금이지만 결국 그 지역에 새로운 산업을 유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개발,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보조가 늘어나고 반면에 사양산업에 대한 보조금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산부의 고민은 자본재 산업이나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과거처럼 금융 세계 지원을 하면 WTO하고 문제가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으로서 WTO체제에서 허용되고 있는 기술개발보조금을 지원해서 기업이 필요로 기술력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일본이 최근에 15개 산업을 선정해서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과거처럼 이 산업에만 지원하겠다는 정책이 아니고 그런 산업들이 필요로 하는 needs를 파악해서 정부가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영상산업이 유망하다면 영상산업 발전에 필요한 환경요건이 조선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needs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저절로 공급이 되면 좋지만 안된다 이것입니다. 바로 그런 needs를 파악해서 정부가 제공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 : KDI에서는 거시 정책이라든지 위기, 불황탈출을 위한 기업정책의 비중을 어떻게 두고 계십니까?

이영기 : 글로벌경쟁시대를 맞아 정부 정책의 자유도가 극히 제한됩니다. OECD나 WTO체제에서 정부가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애를 쓰는 데는 큰 한계가 있습니다.

OECD나 WTO체제 내에서는 거시 정책도 예전보다 제한이 많아졌습니다. 정부는 성장의 주도자 역할보다는 경쟁 체제의 제도적 확립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최근의 한보 사태는 鐵鋼産業, 金融産業, 政治産業이 뒤범벅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과 철강이 튼튼해야 하는데 이 분야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시 정책을 통해서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어야지 성장목표나 특정산업,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최근 한보사태 등에서의와 같이 그러한 경제여건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건전성을 빨리 확립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는 정부가 성장의 주도자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경쟁체제를 확립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결국 경쟁력은 경쟁적인 구조에서 나온다고 볼 때 그러한 시장경제구조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이 제일 중요하고 그러면서도 잘못하면 공정거래나 공정경쟁 정책차원에서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사회 : 저는 MIT의 세뮤얼슨을 만나서 앞으로 미시정책, 거시 정책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더니 “앞으로 정부가 물가만 안정시키면 정부 정책은 거시정책, 기업정책, 산업정책 된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영기 부원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보 사태는 이것은 철강산업과 금융산업, 정치산업이 뒤범벅이 되어 나타난 것 같아요. 금융을 정치산업 밑에 놓으니 정치산업의 수익성이 높아서 정치 지망생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금융산업을 조금 손볼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보가 철강입니다마는 철강은 한보만 해야 되고 다른 데는 못 해야 되느냐 세계 어느 나라 치고 금융, 철강 같은 기본이 튼튼하지 않고는 경쟁력이 강화되는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진입 규제에 대해서 생산기술연구원 원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진주 :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정치산업, 금융산업, 철강산업 같은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대로 지금 현재 체제와 구조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수익이 높은 정치 산업의 수익성을 혁명적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특히 금융 산업과의 연계를 끊어야 합니다. 산업 정책은 어떤 산업을 키울 것인가보다는 어떤 기업을 키울 것이냐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금융산업과 기간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구조에서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정치 산업입니다. 지금 경제학자로서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정치산업이 가장 수익이 높은 산업이다. 정치산업이 더 이상 수익이 높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혁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는 아무 정책도 불가능합니다. 정치산업이 웬만한 산업과는 단절이 되어 있는데 금융산업과는 아직도 연계가 되어 있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산업기술 정책 측면에서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국의 산업정책 전문가인 M. Best가 'New Competition'이라는 책에서 말한 것과 같이 어떤 산업을 키울 것이냐보다 그 산업에서의 플레이어가 누구냐에 대해서도 중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철강산업이 유망하면 아무한테 맡겨도 되는 것으로, 그리고 그것이 정치논리와 연결되어서 불행하게 한보사건 같은 것이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산업 자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망한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플레이어를 키우는 쪽으로 산업정책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회 :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는 제일 위에 올라가 있는 산업이 정치산업이지만 거기에는 완전 경쟁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이나 철강은 독과점 체제로 되어 있어 다른 산업들을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과 우리나라 기간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태 : 금융산업은 어느 산업 못지 않은 고급인력이 필요하고 정보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하이테크(high-tech) 산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로우테크(low-tech) 산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이러한 금융문제를 해

원래 금융 산업은 High-tech 산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low-tech 산업으로 된 가장 큰 이유는 주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라 금융 산업의 과제는 경쟁 체제 확립, 인력 양성, 신용 대출 확대, 산업 지원을 위한 금융 시스템 도입 등입니다.

결하는 첩경은 금융기관의 주인을 찾아주는 데 있습니다.

주인없는 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효율이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은행이기 때문에 주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재벌에게 꼭 주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을 분산시켜 전문금융인에게 경영을 맡기면서도 대리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만 해 놓으면 될 것입니다.

이영기 : 현재 금융개혁이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경쟁체제를 빨리 확립해서 서구 선진 금융기법을 배울 수 있는 인력양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담보대출에서 신용대출로 바뀌어야 합니다.

소유문제는 금융이 산업을 지배하고 산업이 금융을 지배한다는 그런 양단론적인 면에서 볼 것이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금융이 산업을 지원하는 면에서 금융과 산업이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사회 : 우리나라에서 Microsoft 같은 것을 기대하려면 이진주 교수 제자들한테서 기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이 부원장님 말씀대로 기업을 강조해야 되는데 수능시험 1등에서 50등까지 47명이 법대를 지망하고 9개 도와 6개 특별시 광역시에서 1등한 학생들이 다 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paradigm을 뒤집어서 역 피라밋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첫째, 경기도 크기의 스위스에는 은행이 395개가 있다고 합니다. 은행을 세계 규모로 경영하면 각 나라 지도자의 비밀이나 정보도 상당히 많이 알 수 있는데 그러한 정보나 세계경영 차원에서 금융을 해야 될 것이고 둘째, 금융도 하나의 산업으로 키워야 되고 셋째, 우리

산업을 지원하는 대대적인 혁신이 있어야 되고 넷째, 이것을 키워서 정치산업의 수익성이 대폭 떨어지게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 과장님, 우리나라 금융과 산업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 산업도 하나 추가하고 싶습니다. 교육 문제의 해결없이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 문제나 고비용 구조의 해결이 어렵습니다.

우태희 : 정치산업 금융산업 철강산업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교육산업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다른 부처와 얘기를 하다보면 통산부가 왜 교육까지 참견하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마는 교육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전반적인 산업의 문제점의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고비용 구조는 산업의 문제만이 아니라 개인도 고비용 구조입니다.

저의 예를 들면 제가 과천에서 초등학교 자녀 2명을 교육하는 사교육비가 한 과목당 보통 10만원입니다. 압구정동에 살면 한 과목당 15만원입니다. 여자의 경우 피아노, 바이올린, 영어를 가르치면 30만원입니다. 거기다 맞벌이하니까 일하는 할머니 두면 과천은 70만원이고 압구정동은 100만원인데 그나마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최소한 100만원 내지 150만원이 나가는 구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동법 개정하느라고 애쓰고 고통도 컸지만 노동자 입장에서 항상 불만일 수밖에 없는 것이 수직 상승하는 사교육비 문제 해결 없이 임금인상률이 한 자리 숫자나 두 자리 숫자나 하는 논의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교육 문제만큼은 영국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은 시민현장을 채택해서 고객지향 행정을 하겠다고 메이저 총리가 선언했고 마이클 헤젤타인은 명함에다가 '기업을 위한 정부(Ministry for the Industry, Ministry for

교육 문제는 영국에서 배울 만 합니다. '기업을 위한 정부', '고객 지향 행정', '노동부와 교육부의 통합' 등에서 시사받는 바가 큼니다.

향후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이 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관광·영상·실버산업등과 같은 새로운 산업을 산업으로서보다는 규제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the Enterprise)라고 써 다니면서 홍보를 했고 최근에는 노동부와 교육부를 합쳤는데 그 이유는 산업인력 수급을 위해 가장 밀접한 부처들을 통합했습니다.

사회 : 마지막으로 영상산업 환경산업 벤처 하이테크 산업 등의 신산업 진입규제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산업의 경계도 없어져서 education과 entertainment가 합쳐서 edutainment라는 말도 나오는데 진입장벽을 확 풀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SONY가 들어와서 물건 다 파는데 정부는 자꾸 우리 기업만 규제하고 있고 철강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국민들만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태 : 사회자께서도 여러 가지 신산업 말씀하셨는데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가전 등 주력산업은 당분간 이 산업에서 수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산업만을 가지고는 앞으로의 경제성장을 계속 주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산업들이 너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관광산업은 건교부, 영상산업은 문체부, 정통부 그 다음에 또 의료 실버 산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고 있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통상산업부를 제외한 다른 부처는 이런 분야를 산업으로서 보지 않고 규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지요.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에 행정조직 개편을 한다면 저는 산업 관련되는 부처는 전부 다 합쳐야 된다고 봅니다. 정보통신부가 따로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사회 : 결론을 요약해 주시지요.

고부가가치 산업은 다채널로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식 첨단 기술 산업, 자본재 산업, 패션 산업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범주별로 산업협동 정책이 요구됩니다.

이진주 : 제가 주장하는 것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다채널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부가가치 산업은 주로 분모에 해당되는 효율을 고효율로 하는 쪽에 많은 얘기를 했는데 output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고 그것을 쉽게 유형별로 얘기한다면 첫째로 미국식의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 정보통신과 소프트웨어가 주로 하는 산업으로 나가야 합니다.

둘째, 독일, 스위스와 같이 오랜 노하우 축적을 통한 기능적 기술 즉, 기계산업, 정밀화학산업에 연관되는 산업, 특히 자본재산업육성이 될 것 같습니다.

셋째, 패션이나 디자인 산업을 강화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어떤 특정한 산업을 키우자는 것보다 이러한 범주별로 산업협동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 때 좁은 의미의 산업정책은 절대 안되고 정치구조나 제도를 바꾸어야 되고 정부의 행정체제를 기업에 대한 서비스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서 결론이 나기는 힘들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정치개혁, 특히 정치산업개혁과, 둘째 문민정부가 표방한 작지만 강력한 정부형태로의 혁신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정순원 : 오늘 얘기는 두 가지로 집약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그동안 경기가 나쁘면 제조업 경기가 나빠서 그렇다는 제조업 책임론이 많이 부상했었는데 이제는 제조업만의 책임이 아니고 제조업을 둘러싸고 있는 지원 산업인 금융산업 그리고 기간 산업인 제조업을 지원하는 소재산업의 경쟁력 제고 없이는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는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금융, 소재

결국 최근의 경제 위기는 제조업만의 책임이 아니라 금융산업, 소재산업, 교육산업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정책은 약점만을 보완하기보다는 강점을 살리면서 약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규제완화가 GNP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미국이 1%, 일본·독일이 6%이 되고, 우리나라는 6%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 기능의 재정비가 시급합니다.

산업, 제조업에 근무하고 있는 인적 자원에 대한 질적 개선과 교육산업도 커져야 하고 이러한 각 산업 종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정치산업의 기능도 제고되어야 제조업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둘째, 우리는 그동안 문제가 있으면 항상 약점만을 보완하는 쪽에 모든 정책의 초점을 모았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강점을 살리면서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이테크 산업으로 가자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약점을 보완하자는 맥락에서는 하이테크로 가야 된다는 데 저는 분명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10년후에도 우리의 주력산업은 분명히 현재의 기간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기간산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중간 정도 수준의 기술(current technology)을 가지고 있는 산업들의 경쟁력을 유지해 나가면서 거기에서 생기는 여유를 가지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기 : OECD 보고서에서 규제완화를 했을 때 미국은 1% GDP 성장요인이 생기고 일본, 독일은 6%의 확충 잠재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6%보다 높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한 노력이 급하게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정부가 바뀌어야 되고 슬림다운해야 되며 기능을 빨리 재정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구조전환을 위한 노력은 장단기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아까 우 과장님 말씀하신 교육문제는 시급하면서도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교육 부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투자를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노동력의 교육, 재교육, 실업에 따른 직업 이전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에는 기술지도도 필요하지만 전문경영자나 전

문 노하우가 적어서 효율이나 생산성을 높이는데 미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영지도가 필요합니다. 영국에서도 기업경영컨설팅업을 촉진 장려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후에는 우리 경제는 3-4%의 저성장기에 접어들 것입니다. 저성장기 이전에 우리 산업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정부 기업 국민이 다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우태희 : 우리의 경제성장률이 재작년에 9% 성장, 작년에 7.1% 그리고 금년에 6% 이하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10년 정도 지나면 3~4% 정도 성장으로 만족해야 될 그런 시대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아 있는 기간이 길게는 10년 짧게는 5년 정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산업을 제 궤도에 올려놓지 않으면 나중에 3~4% 성장할 때 다시 무엇을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분명히 해야 될 일은 첫째는 규제개혁, 기술개발, 인프라, 전략산업 육성 측면이고 둘째는 경기가 하강기일수록 성장의 질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강기를 견디느냐는 문제인데 제가 볼 때에는 수출과 소비, 투자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마인드를 부추길 수 있도록 정부뿐만이 아니고 각 경제주체들이 다 같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 : 훌륭한 주제발표와 진지한 토론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아쉽지만 이것으로 마쳐야 되겠습니다.

<附錄> 主要 産業 政策 方向¹⁾

(1) 通商 政策

지금까지 우리는 선진국의 개방공세에 대비해 어느 정도를 양보하느냐 하는 방어적 통상정책으로 일관하여 왔다. 이는 시장개방수준이 낮았던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겠지만, 선진국으로부터는 항상 개방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국내적으로는 일방적으로 양보만 한다는 여론의 질책을 받게 되어 있다.

이제는 국내시장을 지키겠다는 소극적 전략보다는 세계시장을 공략하는 적극적 전략으로 선회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통상활동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데에 역점이 두어져야 된다. 위로는 대통령으로부터 아래로는 해외공관의 직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세일즈 외교의 첨병이 되어야 한다.

교역상대국의 부당한 무역장벽과 불공정한 무역거래를 조사하여 한국관 무역장벽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자간, 양자간 통상협상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2) 産業支援 金融制度

정책금융이 그동안 실물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해 온 것은 사실이나, 금융부문이 정책금융을 담당함으로써 금융부문의 경쟁력이 취약해지고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이 저하되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현재 정책금융이 금융부문에서 재정부문으로 이관하는 단계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금융의 재정이관문제를 포함하면서 WTO보조금 협정과 OECD의 보조금 감축논의에 대응하여, 산업지원 금융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가) 政策金融을 포함한 産業支援 金融制度의 合理的 調整

1) 이것은 산업연구원에서 1996년 5월에 작성한 「신경제 장기 구상」을 근간으로 이정태 부원장이 정리한 것임.

- ① WTO 보조금협정상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되는 기술개발, 연구개발, 환경보호, 지역개발보조금 등으로 분류하여 체제정비(현재는 수출, 기술개발, 투자촉진 및 산업합리화, 중소기업지원제도로 분류)
- ② 산업지원 관련 각종 기금 및 자금을 통폐합
- ③ 기업의 운전자금 및 투자자금 지원금융(무역금융, 상업어음할인, 중소기업금융)은 시장실세금리를 적용하여 금리 차에 의한 상대국의 상계조치 가능성을 회피

(나) 産業金融支援을 위한 財政資金의 安定的 確保

- ① 공공자금 관리기금과 국채관리기금의 통합
- ② 각종 기금, 연금, 예금 등 공공자금의 여유자금 중 일정비율에 대해 예탁 의무화
- ③ 국공채 및 지방채의 발행 확대(시장실세금리 기준)

(다) 産業金融支援 關聯 財政資金의 效率的 配分 및 運營

- ① 재정자금의 직접 지원인 경우 무상 또는 저리지원이 아닌 시장실세금리에 기준하여 지원
- ② 과거 특정 기업 또는 산업위주의 지원을 지양하고 WTO 보조금규정의 특정을 배제하는 기능별 수평적 지원이 바람직함.
- ③ 중소기업 또는 수출금융 등은 직접지원보다는 신용보증기금 등 관련기관의 출연 확대 등을 통한 간접지원이 바람직함.
- ④ 특수은행의 전문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장기신용은행: 개발 기관으로서의 전문화 확대 유도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농수축협, 주택은행: 민영화 또는 전문화
- ⑤ 총액대출한도제 중 상업어음 할인과 무역금융을 단계적으로 축소함.

그러나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은 WTO 보조금 협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대기업의 국내 금융기관 차입을 통한 조달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한 존속시킬 필요가 있음.

(3) 産業人力 政策

나날이 심화되는 국제경쟁 속에서 대내외 노동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국가경제의 건실하고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인력양성의 유연성과 질을 제고하고, 인력배분 및 활용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산업인력의 지속적 개발 및 효율적 활용은 인적 자원에서의 비교우위 확보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충 뿐 아니라 근로복지 증진을 통한 삶의 질 제고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 나라는 대내적으로 이미 고임금 및 전반적인 인력부족 시대에 돌입하였으며, 삶의 질이나 노동인권 등에 대한 요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대외적으로는 저임금 앞세운 후발개도국의 맹렬한 추격,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 강화와 대외견제노력(예: 환경, 노동기준과 무역과의 연계 요구) 등으로 인한 압력이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인 성장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인력공급기반의 양적·질적 확충 및 활용도 제고가 필요하다.

(가) 高等教育의 量的·質的 擴充

산업현장의 기능·기술인력 공급기반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이 양적·질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 공교육졸업자의 계속교육기회가 보장되고 공교육과 상급 교육단계와의 실질적인 연계가 이루어짐으로써 이론과 실무를 갖춘 다기능 기술인력층의 양성기반이 확립되어야 한다.

공교육의 신·증설을 통하여 중등단계에서의 기술교육을 확대하고, 산업구조변화에 맞추어 첨단산업 등 수요가 집중되는 분야를 강화하도록 한다. 특히 정

보통신과 산업디자인 부문 등을 중심으로 상업계에 집중되어 있는 여학생의 공고유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고에 대한 재정지원의 강화, 우수한 교사의 양성 및 재교육, 효과적인 교육과정의 개발 및 보급 등을 통하여 공고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특히 현재 시범운영중인 '2+1'제도의 보완을 통하여 산·학의 연계 하에 현장성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며, 공고교육에 대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기업에 대해 병역특례 등 정부차원의 각종 지원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도록 한다.

(나) 理工系 大學教育의 擴充

대학의 평가기준을 엄격히 하고 이에 상응하여 정부지원을 과감히 차별화함으로써 대학간의 경쟁을 유도한다. 기업이나 연구기관의 단설 전문대학원 설립 또는 대학교육에 있어서의 산·학·연 합동 강화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질적 제고를 유도하도록 한다.

산업현장과의 연계 강화, 교육과정 및 교육여건의 대폭적 개선, 교수평가와 학사관리의 강화 등을 통하여 이공계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 첨단기술 및 성장주도산업을 중심으로 대학(원) 정원을 확충하되, 일괄적인 정원확대보다는 인력공급의 탄력성을 높여 인력수요 변화에 효율적으로 부응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職業訓練의 強化

직업 훈련은 단순기능인력 양성 위주에서 탈피하여 다기능 기술인력을 중점 양성하고, 향상훈련 및 재훈련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능력개발체제를 구축하도록 한다. 훈련분야에 있어서도 전기·전자, 정보통신, 메카트로닉스 등 첨단산업 위주로 보강하고, 산업계의 인력수요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의성과 유연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라 기업의 직업훈련제도가 기존의 의무제(분담금

제)에서 사실상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제도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직업훈련도 공공직업훈련 중심에서 사업내 직업훈련 등 민간 위주로 전환해야 하며, 공공직업훈련은 비진학·미취업 청소년, 실업자,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도록 해야 한다.

(라) 中小企業의 人力確保 支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보상수준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 한, 시장기능에 맡겨둘 경우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세제·금융상의 혜택을 확대하여 실질소득을 높여 줌으로써 대기업 취업과 중소기업 취업에 따르는 보상수준의 차이를 좁혀 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인력개발 및 확보를 위한 정부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산업기술대학이나 산업대학 등의 학생선발시 중소기업근로자를 우대하고, 중소기업의 기능·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국내외 연수제도를 확대하도록 한다. 중소기업의 공동훈련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충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병역특례혜택의 수혜기준을 완화하고 특례요원을 확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 女性 및 高齡者의 雇傭促進

여성 및 고령자 등 잠재적인 노동공급원을 산업인력화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으로 하여금 이들의 채용을 늘리도록 경제적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과 방과후 아동지도제도의 정착, 여성 및 고령자에 대한 다양한 근무형태의 보급 등을 통하여 이들의 취업여건을 조성하도록 한다. 아울러 여성 및 고령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강화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성별이나 연령에 의한 부당한 차별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모성 보호 비용의 사회화, 기혼여성을 위한 육아휴직장려금이나 재고

용촉진금의 확대, 직장보육시설의 운영 내지 보육비 지원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 고령자고용촉진금의 확대 등 여성과 고령자 채용에 따르는 기업의 재정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고령자의 경우 단순한 정년연장보다는 임금체계 개선과 직업훈련 확대를 통하여 생산성과 임금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의 임금체계와 퇴직금제도를 생산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고령자에 대한 재교육 및 취업알선기능을 강화하도록 한다.

(4) 産業技術 政策

(가) 企業의 技術開發을 戰略的으로 支援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민간의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세계 초일류 수준의 기술, 잠재시장개발을 목표로 하는 전략기술과 기술의 저변확대를 위한 유망기술의 개발 및 제품화에 대하여 지원을 전략적으로 강화한다.

기술개발과 산업구조조정의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생명공학, 신소재, 영상, 디자인패션, 엔지니어링, 신생산공정 등 미래유망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수요를 반영해야 한다.

(나) 彈力的인 技術人力 養成基盤의 構築

급변하는 기업의 고급기술인력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탄력적인 기술인력 양성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 ① KAIST, 생산기술연구원 등 정부출연기관을 중심으로 수요에 부응하는 고급기술인력 양성체제를 구축한다.
- ② 선진국 대비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대학의 연구시설을 선진국의 50~70% 수준으로 확대하며, 대학에 특별과정의 시설을 유도한다.
- ③ 직업기술교육체제의 최상급 교육기관으로 「산업기술대학」을 경기도

시화지구에 신설하여 1998년 3월에 개교하고, 전국의 공단과 연결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한다.

- ④ 재래산업의 다품종소량체제에 따른 급변하는 인력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부응하기 위하여 업종별 단체·협회 및 협동조합 등의 산업인력의 단기양성 및 훈련기능을 활성화한다.

(다) 複合型 産·學·研 共同研究基盤의 構築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학·연 공동연구센터'를 주요 도시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대상지역을 2000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기업 및 대학 주도, 지자체 지원, 정부 촉진'을 원칙으로 1997년까지 영남지역 등에 2~3개의 시범적인 테크노파크를 조성하도록 추진한 후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현재 영남대, 조선대, 부산대에서 시행중인 신기술보육사업(T.B.I.)을 전국대학에 확대하여 시행한다.

(라) 産業情報化 推進

기존의 '섬유정보센터'와 같은 유형의 업종별 정보센터를 기계, 전자, 자동차, 철강 등의 타업종으로 확대하여 업종별 산업정보화를 추진한다. 또한 산업기술정보원(KINITI)이 대구, 전북, 광주에서 추진중인 지역별 산업정보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업종별, 지역별 정보유통체제를 구축한다. 이를 산업정보전산망과 인터넷(Internet) 등 국제 컴퓨터통신망에 연결하여 기업의 CALS체제의 도입을 촉진하고 사회·경제적 거래비용을 줄여 산업정보화사회를 앞당긴다.

(마) 産業標準化의 基盤을 強化

자본재표준화 확대, 정보표준화 확대, 색채표준화를 추진하여 CALS체제의 도입과 부품·소재 공용화에 기여한다. 이를 위하여 단체표준 제정기관을 확

대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표준화기반을 넓히고, 표준이 상이하여 낭비되는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한다.

(바) 中小企業의 技術革新能力 提高

섬유패션센터, 자동차부품 성능시험장을 건설하는 등 중소기업의 공용연구시설 설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신기술창업자에 대한 창업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를 촉진하며 산·학·연 컨소시엄에 의한 연구개발지원을 강화한다.

(사) 國際技術協力基盤 強化

지적생산시스템(intelligent manufacturing system) 프로젝트 등 국제적인 대규모의 공동연구에 우리 나라의 참여를 확대하고, APEC 테크노마트의 정례개최 등 기술행사를 지속하며, 지역별 테크노마트에 외국의 우수한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법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아) 研究開發活性化를 위한 制度的인 與件 整備

‘기술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기술개발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켜 기술개발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기술담보제도’를 도입하여 기술의 거래를 촉진시킴으로써 기술혁신형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한다.

(5) 産業構造 政策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정책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특정산업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인력, 기술, 금융, 입지, SOC 등의 자원공급을 확대하는 기능별 정책이다. 정부역할은 직업 및 고등교육기관에 재정을 지원하고 기초기술개발을 지원하며, 금융자율화를 추진하고, 토지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입지선정을

자유롭게 해주고, SOC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확대 공급되는 자원이 어느 산업부문으로 흘러 들어가느냐는 정부의 결정이 아니라 시장메카니즘을 통하여 결정된다.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절하고 기업이 산업기술을 개발하며 자금소요가 많은 산업은 더욱 많은 대출을 받고, 조성된 공업단지에는 어떤 업종이든지 입주할 수 있다.

다른 하나의 유형은 정부가 특정산업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해서 모든 지원을 우선 배분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 유형의 절충형이다. 왜냐하면 첫번째 유형은 이른바 용단폭격형인데, 자원의 낭비가 클 우려가 있고, 두번째 유형은 조준사격인데 이는 WTO 체제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제3의 절충식 유형은 민·관의 합의를 통해서 유망산업을 도출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면서 유망산업의 needs를 세밀히 파악해서 수요충족형 자원공급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단 유망산업에 대한 지원은 배타적인 것이며, 어느 산업이든지 이용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유망산업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다.

교육의 경우 첨단기술부문의 인력양성에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대학내부의 경직성이 타파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차별화한다.

기술의 경우도 정부지원금의 배분시에 미래의 성장성을 고려하여 전략적인 선택을 하며, 공업단지의 조성도 종래의 중화학공업형 단지가 아니라 지식집약형, 소프트형 산업에 적합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장래 유망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비롯한 제도적 저해요인이 거미줄같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미시적으로 세밀하게 파악하여 개선해주는 접근방법이 요구되는 것이다.